



양재규
정책연구팀 팀장, 변호사

우리에게 범인의 얼굴을 ‘볼 권리’가 있는가

점심시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이는 밥 먹으러 나온 직장인들의 세 가지 태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애당초 신호를 지킬 뜻이 없는 것처럼 도로를 건넌다(선구자), 몇몇 사람들은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뀔 때까지 꼴짓이 기다렸다 건넌다(선비), 그럼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건널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선구자들의 뒤를 따른다(대중). 당신은 어느 쪽인가.

이런 일이 꼭 횡단보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도 그렇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흉악범의 초상 공개 논란에서 언론사들이 보이는 태도는 제각각이다. 초상 공개의 이유를 당당히 밝히고 처음부터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범인의 실명과 초상을 숨기는 언론사도 있다. 물론, 많은 언론사들은 처음에는 밝히지 않다가 결국에는 공개의 대열에 동참하고 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신 있는 언론사라도 속으로는 몹시 갈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우리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안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외국의 사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8월 말, 영국의 해리 왕자가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누드파티를 벌였고 그 장면을 담은 사진 두 장이 미국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공개된 사진 속 해리 왕자는 벌거벗었다. 해리의 나체 사진 덕분에 지금 라스베가스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사진의 경제적 가치가 12만 불이라느니 하며 미국 언론들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유쾌한 미국과 달리, 해리의 나라 영국은 좀 심각하다. 평소 수줍음 많은 왕자의 갑작스런 방탕함에 놀란 왕실은 영국 내 언론사들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거의 모든 언론들은 해리 왕자의 나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The Sun지만큼은 ‘우리는 독자들이 그 사진들을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we are publishing the photos because we think Sun readers have a right to see them)며 문제의 사진을 공개한다.

The Sun이 해리 왕자의 나체를 ‘볼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77%에 달하는 영국인들이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인터넷에서 너무나 쉽게 사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만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The Sun의 주장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일 뿐 규범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이쯤에서 규범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한다. 영국인들 또는 미국인들에게 해리 왕자의 나체를 볼 권리가 있나? 우리에게 성범죄자라든가 연쇄살인범의 얼굴을 볼 권리가 있나?

이 점을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은 아직 없는 듯하다. 다만, 1998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이래 현재까지 그 논지가 유지되고 있는 96다17257 판결에 따르면 범인의 초상이나 실명 공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대법원은 언론의 범죄 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007년에 이르러 이러한 법리는 좀 더 세밀하게 발전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여 식약청 단속에 걸린 지방 대도시의 정신과의원 원장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이 적시 한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더라도 그 범인이 바로 원고라는 것까지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06다65620). 물론, 2009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기존 논지를 유지하면서도 고도의 해악성이나 비법성, 시사성을 갖는 범죄의 경우에는 실명을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9다71).

법적으로 범인의 실명 및 초상 공개는 원칙적으로만 금지되어 있을 뿐 그 가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긴 ‘흉악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의 말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확실한 것은 범죄자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 증오, 그리고 나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다. 사람들의 이런 분노와 불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바로 언론의 몫이다. 앞으로 범죄보도를 대할 때 우리 언론이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함께 지켜보자. 🍌